

‘구의회 현안질문 불출석’ 문인 광주 복구청장 “특별시 출범 준비”

문인 광주 복구청장이 거듭된 구의회 긴급현안질문 불출석 사유로 '특별시 출범 준비'를 들며 구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구의회는 반복된 문 구청장의 긴급현안질문 불출석 통보에 “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의도적인 회피이자 오만한 불통 행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문 구청장은 4일 구의회 긴급현안질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행정통합이 한걸음 가까워진 만큼 이제는 특별시 출범 이후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특별법 중앙자산업 육성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양자 AI 데이터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복구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향후 양자클러스터와 국가 양자산업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방문해 수정이 필요한 특별법 특별조항들을 설명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제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시간이다. 구의회도 복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광주 복구의회는 이날 오전 제308회 복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문 구청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열 예정이었다. 회의는 문 구청장의 거취를 비롯해 조기 사임 반복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려 했지만, 집행부가 전날 오후 문 구청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중론 구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됐다.

문 구청장의 긴급현안질문 불출석은 이번이 두번째다. 구의회는 지난달 14일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어 같은 사안을 물으려 했지만 문 구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무산됐다.

구의회는 당시 문 구청장의 긴급현안질문 불출석에 성명을 내고 “구청장 입장을 감안해 조



문인 광주 복구청장이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새로운 광주포럼 토론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에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

문 구청장 “양자 AI 데이터센터 개소식 참여”

의회 “의회 절차 무력화 의도적 회피·불통 행정”

정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해 무산시킨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의 전면 부정이자 주민 모독”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에도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되자, 대표 질의에 나서기로 했던 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에서 본인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사임 반복과 거취문제에 대해 주민 앞에 직접 설명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라고 문 구청장을 꼬집었다.

또 “(문 구청장의 불출석은) 42만 주민을 기

만하고 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의도적인 회피이자 오만한 불통 행정”이라며 “문 구청장은 반복되는 본회의 불출석과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주민과 의회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당당히 본회의장에 나와 사임 반복과 거취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6·3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문 구청장은 지난해 12월30일 의회에 “2026년 1월8일자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

서를 제출했다.

문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시점보다 한 달 앞서 사임한 뒤 자연인 신분으로 선거를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전남 시도 통합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문 구청장은 사임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7일 사임서 철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시도 통합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에 밝힌 사임 결정을 우선 철회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 신청을 철회하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신청하면서 복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입지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뉴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관문인 광주시의회 동의 과정에서 ‘판도라 상자’인 청사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은 4일 행정통합 의회 동의와 관련한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주)청사 문제, 그 중에서도 실국별 현안을 조정하는 콘트론타워인 기획조정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디에 뒀냐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초기 갈등을 막기 위해 광주청사, 전남청사, 제3의 청사를 공동 활용하고, 특별시장의 집무시간이나 부서 배치를 기계적으로 정확히 안내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기초설 배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에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이 실장은 “전남과 아직 구체적 논의는 하진 않았고, 통합 후 특

“기조실은 어디로?” 다시 불거진 통합 청사 논란

광주시의회, 통합 특별법 최종 동의 과정서 잇단 질의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市 “실무협의를 꼼꼼히 설계”

별시장 직속 통합추진본부와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촘촘한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고, 서 의원은 “특별법 통과 전이나 지방선거 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합의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채은지 의원은 “청사 배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만큼 특별법안에 담아야 하고 기조실은 광주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장,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18명은 최근 마라톤 논의 끝에 통합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했고, 청사는 전남동부(순천, 전남도 2청사), 무안(전남도청 본청사), 광주(상무지구 시청사)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주청사 등 청사 세부 배치 방안은 6월 통합단체장 선거,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후 초대 특별시장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관가에서는 합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청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대안 제시도 이어지고 있다.

초대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의원은

“권역별로 총 3~4개 청사를 운영하고, 특별시장도 순환근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청사 소재지와 관련해서 “특정 지역에 뒀다 같은 일을 일으키기보다 분산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도민공청회에서 ‘특별시장은 3곳 중 어디로 출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3개 청사를 어느 정도 다니면서 근무해야 하는데, 사실 특별시장은 잠시도 시청사에 있을 날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했던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본청(주청사) 없이 3곳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은 행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 문제를 차기 시장에게 넘기는 것은 갈등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청사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뉴스

‘행정통합’ 판세 관망

광주·전남 예비후보 등록 저조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0일 전인 예비후보 등록 첫날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기 1명씩만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특별법이 현직 단체장은 본 후보 등록일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등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 지형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광주에서는 민주노동당 광주본부장 출신 이종욱 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전남에서는 장광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만이 전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명단에 올랐다.

첫날 등록 신청 집계 결과 광주는 교육감, 전남은 도지사 예비후보자가 아직 없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등이 정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지만, 각급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는 후보자 수 대비 등록이 저조하다.

현재 광주시장 후보군은 10명 안팎, 도지사 후보도 6~7명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시·도교육감 출마 예정자도 각 4명, 7명으로 분류된다.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여부에 따라 선거판세가 송두리째 요동칠 수 있어 후보마다 판세를 신중히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법안 내 부칙이 명기한 ‘선거에 관한 특례’는 현 단체장은 본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5월14일까지는 현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 특례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예외가 가능하다.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입장에서는 최대한 직을 유지하며 ‘현역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를 이유가 많지 않다.

여권은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거듭 공언하고 있다. 결국 6·3선거 통합단체장 선출이 확정돼야 후보자들의 최종 출마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입장에서는 행정통합으로 선거구가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되면 대도시권, 농어촌권 공약과 전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이달 안에 통합특별법이 처리된다 해도 선거는 불과 석달 밖에 남지 않아 각 후보마다 고심이 깊을 전망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선거비용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은 각각 7억2400여만원, 전남지사와 도교육감은 각각 15억 8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두 지역을 단순 합산하면 22억원 가량이나, 유효투표의 일정 비율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거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받지 못한다. 때문에 선거 권역 확대에 따른 재정적 준비가 여의치 않거나 지지율이 저조한 예비후보는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날부터 시작된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일정에 이어 오는 20일부터는 광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다음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번 6·3지방선거 본 후보 등록은 5월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뉴스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해양수산부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썹(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